

## 황교안의 박근혜 적폐 지키기

“한·일 위안부합의  
유지돼야 한다”

관련 기사 6~7면



박유하를 옹호하는  
일부 진보파에  
대한 비판

6~7면

박근혜 퇴진  
운동의  
현재 쟁점들

3면

안갯속을  
헤매는  
한국 경제

8면

위험천만한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4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방어  
성명 발표

2면

조류 인플루엔자 :  
무능해서 더욱 위험한  
황교안 내각

4면

박근혜-황교안 정부,  
사적연금 강화하고  
공적연금 약화시키다

5면

##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임준형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주노동자가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동포와 비전문 외국인의 취업규모·허용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단속추방 강화, 초단기 계약직 계절 노동자 도입 등 이주노동자 차별과 통제를 강화해 왔는데 그 바통을 황교안 내각이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단속 과정에서 서만 3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신고포상금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책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는 범죄가 아니다. 정부는 입국을 허용한 규모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필요한데도 입국 허용 인원을 통제하고 국내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고 사장들은 이를 악용한다. 노동자가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뛰쳐 나오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출입국 규제와 차별적인 인력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주노동자 단속·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미등록 체류를 없앨 수 없고 이들의 처지만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최빈곤층의 소득이 최근 감소했다며 이번 대책을 옹호했다. 그러나 쉬운 해고와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먹튀’한 박근혜 정부야말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범이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체, 농축산업 등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자리들은 저임금인데다 위험하고 너무 열악해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한다. 그 때문에 정부도 이주노동자들을 일자리 도둑으로 비난하면

서도 이주노동자 유입을 계속 늘려왔다. 2017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2천 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2015년보다 많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부분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자신도 이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성

##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김승섭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

지난 11월 25일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전국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적극 조력했다. 그 결과 8명이 단속돼 5명이 강제추방됐다.

단속 직전에 이런 행동이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건설노조 전북본부에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에도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거듭 전주시 등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제기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사업 담당자 회의에서 이 사건은 심각하게 다뤄졌고 건설연맹과 건설노조에 제발방지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진상조사와 성명 발표 등을 결정했다.

12월 30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해 그동안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과 단속 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사명”이라는 지적은 매우 옳바르다. 그리고 강제 출국 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향후 제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설노조 집행부들의 간담회에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공존의 대상이며 단속·추방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건설노조 집행부는 향후 출입국관리소를 압박해 단속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건설노조 이영철 토목건축분과장이 사과를 했다.

건설노조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닌 만큼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건설노조 내의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이 어떻게 함께 활동하고 투쟁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과 열악한 조건을 강요받는 건설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워 온 건설노조에서 노조 간부들이 주도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 이간질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보다 싼 값에 고용하고 더 오래 일을 시켜 이득을 보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착취하는 사용자들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용자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온갖 권리를 옥죄는 제도(고용허가제, 단속·추방 등)를 시행하고 차별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제도 때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내국인 조합원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전술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건설경기가 후퇴하면 사용자들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에 수월한 미조직 노동자들(내국인 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로 건설현장을 더 많이 채우려 할 것이다.

결국 불법 하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주노동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져 단결이 깨지면 이는 결국 사용자만 이롭게 된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에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이 있다. 지난 11월 30일 민주노총의 박근혜 퇴진 총파업 집회에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이 함께 파업을 하고 참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의 세월호 집회, 주말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도 함께 참가하며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봐도, 이주노동자 유입과 실업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자리 상황이나 임금 수준은 경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호황이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이 모두 늘고 불황이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대공황기였던 193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었지만 어느 나라나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 호황기였던 1950~60년대에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주민을 대거 유입시켰지만 거의 완전고용을 이뤘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 저임금과 실업의 고통을 이주노동자들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정부는 저임금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불만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해 자신을 향한 비난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는 이간질이 먹힐수록 노동자들은 분열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은 더욱 후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진정한 이유다.

정부가 차별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려 드는 것에 맞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해야 한다. 임금 등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조직해 함께 투쟁하는 방식이 노동계급의 힘을 발휘하는 데서 더 효과적이다.

에게 손을 내밀면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할 수 있다.

또,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이 고령화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건설 현장 유입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건설노조 중앙과 건설노조 몇몇 지부들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선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나해부터 몇 년간 정부는 기업들의 이윤을 위협하는 건설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 거듭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탄압에 맞서 건설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지난 9월 독일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일손을 뺐다. 이렇게 건설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며 함께 싸우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건설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김문성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뤄질 듯하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새누리당은 지지를 폭락과 함께 물로 쪼개졌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연인원 1천만여 명이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두 달여 만에 만들어낸 정치적 변화다. 민중의 투쟁과 분노가 오만방자한 집권당을 극심한 위기에 빠뜨렸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설이게도 정권 퇴진 운동이 아직 그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그 많은 사람이 영하의 날씨에 눈비 맞고 거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 박근혜의 '비선' 통치가 문제가 된 마당에, 박근혜의 '공식' 업무가 정지됐다고 정권의 악행이 멈출 거라고 생각할 근거가 애초에 없었다. 박근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심판의 시간을 끌 것이다. 우파는 여전히 호시탐탐 역전 기회를 노린다.

그렇수록 운동은 황교안과의 대결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적 유예 상태의 박근혜를 대신해 권한대행 황교안이, 잠시 멈춘 강성우파 정권의 시계를 다시 돌리려 한다. 황교안 내각이 설사 은밀한 부패의 몸통은 아닐지언정, 그 부패와 융합해 박근혜 정권이 벌인 반민중·반민주적 학정의 몸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박근혜 퇴진이 기정사실화됐으니, 차기 대선을 겨냥한 입법·개헌 과제 목록 작성과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 후보 암묵적 지원에 더 신경을 쓰자는 일부 세력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통속 황교안 내각과의 전투나 현재 압박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려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거두게 한 바로 그 힘을 여전히 중시해야 한다. 그것은 독립적인 대중 투쟁의 힘이다.

## 우익의 새 아이콘으로 등극한 황교안

황교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정원 권한을 늘려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할 국가사이버안보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 입법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여소야대 국회에 어떻게 맞서려 하는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답게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자 포상액도 20억 원(종전 5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합의가 어떤 것이냐"며 기존 합의를 옹호하고, 차기 정권에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대표적인 적폐 청산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한 종편 채널은 경찰청이 11월 19일 퇴진 운동 주말 행진을 경복궁역까지 허용한 것을 황교안이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경찰이 주말 시위에 더 전진 배치된 것이나, 부산에서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경찰 폭력으로 막으려 한 것도 황교안의 우파적 통치 유지 기조와 연관돼 있을 것이다.

이런 황교안 아래서 적폐 장관들의 행태도 여전하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든 문화체육부의 장관 조운

선은 '내부 제보자를 데려와 보라' 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가임기 여성 전국 지도를 만들어 지자체별 경쟁을 시키겠다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추가 '진상 규명'에 반대했다. 노동개약을 추진해 온 노동부, 한일 '위안부' 협상을 옹호하는 외교부 등 여전히 변함은 없다.

일부 우파 언론과 논평가들은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면 황교안을 우익의 새 아이콘으로 치켜세운다. 심지어 정통 보수의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한다. 벌써 황교안을 대입한 대선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황교안 내각을 겨냥한 투쟁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본질 흐리기다

애초 박근혜 정부의 존재 이유는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이를 잘 관철하려고 우파적 통치를 실행하는 것에 있었다.

지배계급 다수는 더는 보호하기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박근혜를 제거하고 고통전가 기조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를 '국정 정상화'라고 부른다. 탄핵 인용 결정이 1월 말에 나올지 모른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검이 박근혜를 압박하는 강도도 세지고 있다(물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전경련의 기관지라 할 만한 <한국경제>는 "모두가 경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며 운동의 압력 때문에 기업 규제 완화가 늦춰지는 것에 짜증을 부렸다.

그러나 폭발적인 대중 저항 때문에 노골적인 우파 통치 기조를 대놓고 유지하기는 힘이 드니, 현 상황에서는 황교안 체제를 지지하면서 여야정 협치를 주문한다. 더는 기존 정치체제의 안정을 흔드는 일들(야당들이 운동을 지지하며 그 요구를 국회에서 대변하는 일)은 중단하라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 박근혜를 도마뱀 꼬리 자르듯 버리고 이제는 지배계급이 큰 틀에서 단결(협치)하자는 것이다.

그 방안 하나가 개헌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다. 12월 30일자 <조선일보>의 사실 제목은 "역사적 개헌특위 출범, 통치 끝내고 협치 열어 달라"이다. 탄핵안 가결 직후 야당들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이나, 1월 30일 여야 주류 4당(민주당, 새누리

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고 개헌특위를 가동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위기 속 단결(협치)'을 주문한 지배계급 여론에 부합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행 헌법 아래서,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일원인 노태우가 집권해서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강력할 때에는 "물태우" 소리를 들었고, 한때 지지율 90퍼센트를 구가하던 김영삼은 "산 송장" 소리를 들었으며, 김대중은 임기 초 반 년이나 총리를 임명하지 못했다. 노무현은 그 스스로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 갔다"고 푸념했다.(그럼에도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은 줄기차게 계속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 새누리당이 지배하고, 우파 지배자들이 이 정권을 전폭 지지하는 상황이 이른바 제왕적 권력 현상의 실체다. 계급적 이익(과 정권 존속)

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서로서로 감싸 주고 덮어 준 것이다. 이명박의 '4자방' 비리를 박근혜(의 검찰)가 덮어준 일이 한 사례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의 조문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 파위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잘못(적폐와 책임)을 가리고 면제해 주는 허구적 담론에 가깝다. (피억압 대중에게 헌법이 국가권력을 더 제약하고 기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게 좋겠지만, 그것이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강력할 때이다.) 퇴진 운동 일각에서 특정 지지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개헌 정국에 선불리 부화뇌동하다가는 운동이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오히려 불평등 사회를 더 공고히 해온 박근혜의 학정 때문에 민중이 겪은 좌절과 분노, 투쟁이 적폐 청산 요구에 더 반영돼야 한다.

## 헌재가 박근혜를 조기 탄핵할 수도 있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 무더기 사실조회 신청을 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최순실도 거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들 모두 탄핵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 한다. 친박 우파도 헌재 앞 시위를 벌이며 "탄핵 무효"를 외친다.

그러나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형사재판 식으로 탄핵심판을 하자는 것은 세력 균형 변화를 꾀할 시간을 벌여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박근혜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헌법재판관 구성인데도, 박근혜가 시간을 끄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우주 최강급 독점욕을 가진 박근혜가 헌재 심리를 빨리 해서 권좌로 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시간을 끌려고 하겠는가?

이는 헌재 탄핵심판이 단순히 사실 심리가 아니라 정치 재판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이 정치·사회적 세력 균형에 영향을 받게 됨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수백만의 거리 투쟁이 국회를 압박해 압도적으로 탄핵소추를 가결토록 만든 것은,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거대한 압박이 헌재에 가해져 있음을 뜻한다.

이런 세력 균형 때문에 지배계급 다수도 만신창이가 된 박근혜의 존재를 부담으로 여기고 빨리 털어 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애초 빠르면 3월 초에나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헌재소장인 박한철의 퇴임 전인 1월 말(설 연휴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주 2회 심리를 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 이 글의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對中)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라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주위를 일주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트럼프를 겨냥한 무력 시위였다.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만큼 중국한테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다.

그러나 트럼프도 대만 문제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꺼내든 게 아닌 듯하다.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자, 미국은 대만 해협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투자 능력 강화를 경계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사상 가장 큰 액수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면서 대만의 군사력도 증강시키려 해 왔다.

올해 미국 의회는 미국과 대만의 군장성과 고위급 관료의 교류가 새롭게 포함된 2017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오바마 정부의 대만 정책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 물론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점 등은 전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전명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일본도 미국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



대만 인근에서 위험천만한 힘 겨루기 하는 중국과 일본

고 있다. 일본에게 대만 주변의 해상교통로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최근 일본은 중국 정부의 항의를 불사하면서 대만 내 일본의 외교 창구 구실을 하는 ‘교류협회’의 명칭에 “대만”을 넣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대만에게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총통에 당선한 차이잉원은 대만 독립을 주

장해 왔다. 이 점도 양안 관계에 긴장을 새롭게 높여 온 요인이다.

따라서 최근 대만 문제를 놓고 중·미·일의 갈등이 높아지는 것은, 그동안 누적돼 온 경쟁의 결과다.

## “아시아 재균형”

트럼프가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할 이유는 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한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나중에 ‘아시아’ 재균형’이라고 불린 정책은 실패했다.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상대적 약화를 막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 속도를 둔화시킨다는 목표 면에서 말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가 중국과 협

상하고 러시아에도 손짓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함을 반영한다.

박근혜가 탄핵될 위기에 처해 한국의 대외정책이 불확실해진 점도 트럼프가 동아시아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를 자극할 것이다.

트럼프는 해군력 확충을 공언해 왔고, 그 주된 타깃이 중국이라고 얘기해 왔다. 그리고 최근 그는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와 관련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 언론인에게 이 말이 “핵무기 경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들도 향후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의 질과 속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불안 요소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점점 증대해 왔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그 불안정을 더 악화시킬 계기가 될 듯하다.

수년간 갈등이 악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이 관계 악화를 막고자 맺은 기존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를 놓고 1970년대 중국과 일본이 맺은 암묵적 약속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미·중 간의 합의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의 갈등과 모순이 깊어진 것이다.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커질 듯하다.

김영익

##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역대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로 평가 받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오리가 2천8백44만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의 30퍼센트가 살처분 됐고, 계란 한 판(30개)값은 평균 8천 원으로 올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최대 0퍼센트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미국에서 수입된 계란은 대란 30알 기준 4만 원이었다. 항공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배로 수송하면 20일 정도가 걸려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 국장은 “항공운송비 지원도 지침은 없다”, “(계란 수입을) 민간에서 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AI 의심 신고가 27일 1건, 28일 0건, 29일 1건을 기록해서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정부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3천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 했기 때문에 감염되는 농장 숫자가 다소 줄어든 수는 있지만 종식을 못



박근혜·황교안 정부 아래서 편하게 살 날 하루 없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지금은 안심하긴커녕 오히려 더 긴장할 시기다. 초동 대응을 잘했다고 알려졌던 일본도 2~3주가 지나서 다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안심시킬 때가 아니라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정치적 이해관계부터 따지며 위험을 축소하려는 황교안 정부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초동 대응도, 소독약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을 보시오) 황교안은 12월 23일에도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비상한 노력을 해 달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나 했다. 황교안에게서 세월호 참사에서 봤던 박근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I가 꺾였다고 보도하는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문제다. 지금은 희망사항이 담긴 보도를 할 때가 아니다. 재난 영화에서 보던 뻔한 스토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변화무쌍

이번 AI는 2014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 산란계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축산 방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H5N8)는 산란계에 쉽게 감염되지 않아 주로 오리가 감염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H5N6)는 산란계에 쉽게 감염된다고 한다. 잠복기도 2.4일로 더 짧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변이가 쉽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

태로 자주 바뀐다. 예전대, 사람이 걸리는 독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다.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산란계가 큰 피해를 본 것도 바이러스 형태의 변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AI는 언제든지 더 치명적인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리와 닭 사이의 감염 여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감염되는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AI로 인한 인체감염은 총 1천7백22명이며 그중 절반가량인 7백85명이 사망했다. 현재의 축산시스템 안에서 전염성이 더 강한 인플루엔자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계획엔 가장 기본적인 철저한 차단 방역뿐 아니라 축산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돼야 할 것이다.

김무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수의학과 학생

#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 장호중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정작 노후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가칭 ‘조록 봉투 사업’), 그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 달에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아까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정부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듯하다.

그럼에도 노후 빈곤 문제는 지배자들에게도 근심거리인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12월 20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전체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린다. 노후 준비가 ‘잘 된 가구’는 8.8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노후 빈곤은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동시에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이고 평균보다 다섯 곱절이나 높다. 생색내기 수준이라도 노후 ‘대책’을 내놓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복지 부담을 최대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우선순위가 기업의 이윤 증대에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법인세 증세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세수 증대에는 반대하는 까닭이다. 법인세 부담이 제자리에 머문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은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09년 1.7퍼센트에서 2014년 2.48퍼센트로 무려 46퍼센트나 늘었다.

특히 압축적 경제 성장 속에서 시작된 우리 나라의 복지제도는 소득 보장보다는 자본 축적에 유리하게 설계됐고, 노동자들의 부담은 큰 반면 혜택은 미미하다. 연금은 물론 의료·산재·실업 급여도 정부가 책임지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험료를 거둬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다. 우리 나라 기업주들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OECD 나라들 중 가장 낮다.

기초연금도 ‘먹튀’하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삭감한 박근혜 정부는 내놓은 노후 대책이란 게 바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뒤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 받던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물론 기업주들도 이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간다. 퇴직연금은 그 운용과 지급을 민간 금융회사가 맡고 있는데, 국민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지도 않으므로 불안한 것이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대책이 없고 갈수록 실질연금액도 줄어든다. 2014년 상반기에는 퇴직연금 수급자 중 97.1퍼센트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10만 명당) 출처 : WHO, 《Preventing suicide》, 2014

했었는데, 대책 발표 2년 뒤인 2016년 6월에는 이보다 늘어난 98.4퍼센트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 비율도 2년 동안 15.4퍼센트에서 16.8퍼센트로 1.4퍼센트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퇴직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반기지 않는 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따르게 될 각종 규제 때문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운용 수익을 기대하던 금융사들도 실적이 낮아 불멘 소리를 하고 있다. 그나마 비과세 혜택을 늘려야 가입률이 오를 텐데 정부의 노동자 증세 정책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애당초 퇴직연금은 기업 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금융사들이 운용해 ‘파이를 키우겠다’는 발상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되면 노동자들도 퇴직금보다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금융사들도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전체의 이윤율이 떨어지고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이 실현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 동안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물가인상률보다도 낮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퇴직금으로 금융사들을 먹여 살리는 꼴이었다.

금융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은 12월 3일 보고서를 발표해 “공적연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빨라지며 이제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려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고, 한국의 공적연금의 규모와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렀으니 사적연금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사적연금을 키우려는 시도는 결국 노동자들의 노후를 희생시켜 금융사의 이윤을 보

장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다. 금융사들의 이윤도 보장하고 최소한의 연금도 보장하려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할 텐데 이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혹은 임금 삭감으로 또다시 노동자들에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한국의 공적연금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조차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하는 수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을 합산한 총표준소득대체율인데 제도상으로는 50퍼센트다. 이는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대체율(41.3퍼센트)보다도 높다.

그러나 2014년 12월 한국의 실질대체율은 25.6퍼센트밖에 안 된다. 고용 불안정과 광범한 사각지대 때문이다. 2060년이 되도 평균 납입 기간은 21.3년 이어서 실질소득대체율은 26.9퍼센트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EU 27개국의 평균 ‘실질대체율’은 48퍼센트인데, 이조차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연금 삭감 정책으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연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적립돼 있는 기금이 5백46조 원이나 된다. 노인 6백만 명에게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백50만 원씩 지급하기에 충분한 액수다.(박근혜 정부는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도우려고 이 돈을 썼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 수천억 원이 날아갔다.) 기업주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고, 고용기간을 늘리면 이보다 더 ‘지속 가능’해진다.

출산을 저하 등 고령화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받기도 하지만 고령화는 결코 자연 현상처럼 불가피한 게 아니다. 노후·양육 부담이 줄어

들고 대중의 삶이 나아지면 고령화 추세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고령화 예측은 자본가들의 우려를 반영하느라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대폭 삭감했던 2006년 통계청은 2050년 무렵 인구가 4천2백3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1년에는 4천8백10만 명, 2016년에는 4천9백30만 명으로 줄

거라고 달리 예측했다. 그동안 출산율이 크게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계 인구 전체를 부양하고도 남는 부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노인들과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일 뿐이다. 평생 부를 생산하느라 혹사당한 노동자들의 노후를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업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회 | ☐ 기타 )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 원 | ☐ 기타 (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김영익

12월 29일 황교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년 전의 합의를 즉시 폐기하라는 대중의 공분을 외면한 채 대표적 적폐인 ‘위안부’ 합의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거기서 그가 얼마나 친제국주의적 인사인지도 드러난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뜨거운 정치 쟁점인데, 이 한가운데에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논란도 있다. 20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대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미 민사 재판에서 박유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내려져, 선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공간이 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을 심각하게 모욕한다고 여겼고, 결국 박유하를 고소했다. 그리고 민사 재판부는 책 34곳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까지 내놓았다. 삭제된 34곳 중 일부라도 살펴보면, 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에 크게 분노했는지 심본 공감하게 된다.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67쪽)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160쪽)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294쪽)

### ‘반일’ 비판

박유하는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주장해 온 학자다. 그는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 때문에 한일 간 진정한 화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집필 목적이 “민족주의를 이용했거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진보좌파에 대한 비판”<sup>\*</sup>임을 숨기지 않는다.

박유하는 책 서문에서 아예 이렇게 주장했다. “이제까지의 20년 동안에는 오로지 소수의 관계자들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태도를 결정지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이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국내 ‘위안부’ 관련 단체와 좌파 민족주의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가 “정의”를 “독점”하지 말고 기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일 간 ‘화해’가 가능하다는 게 박유하의 핵심 메시지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들과 달리 일본제국 신민인 ‘제국의 위안부’였고, 차별을 받으면서도 ‘애국’적 존재로서 일본군 병사들과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방법은 터무니없다. 일본군 병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증언에 등장하지도 않은 조선인 ‘위안부’의 의식을 추측하거나, 일본인 남성이 쓴 소설을 통해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해석하는 식이다. 일본군 출신자들의 증언 등으로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을 사실상 왜곡한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 왜곡

심지어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왜곡하기도 한다. 예컨대 ‘위안부’들이 군인과 함께 즐기기 위해 아편을 사용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130쪽).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인들이 성욕 증진을 위해 아편 주사를 ‘위안부’에게도 찔렀다고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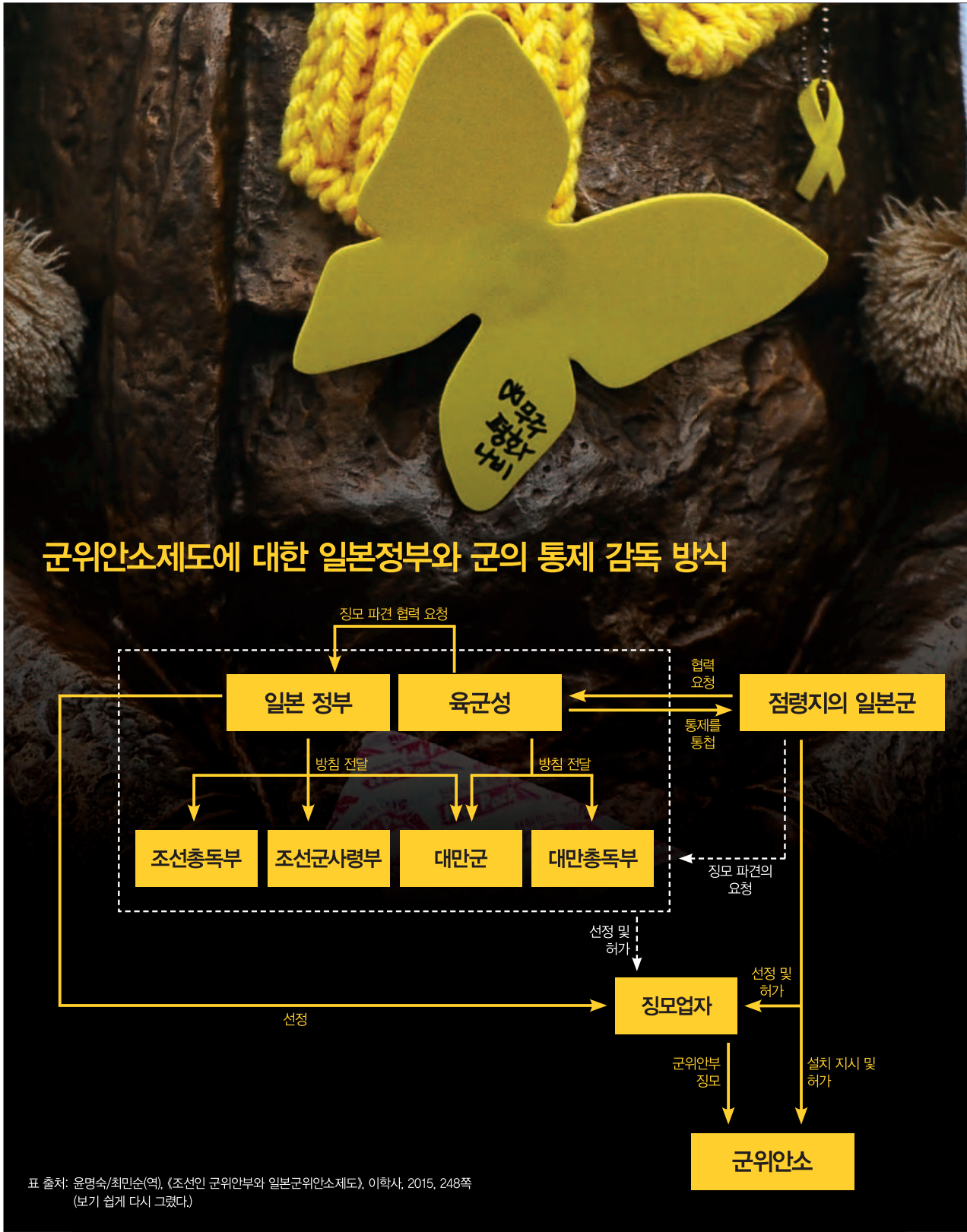
박유하는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고 내 운명이고, 나를 그렇게 한 일본 사람을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해”(75쪽)라는 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한다.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에서 그는 이 말이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그녀의 말은 갈등을 푸는 계기가 결코 체면 자체나 사죄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준다”고 썼다.(한국어판에는 이 문장들이 없다.)

그러나 박유하는 이 증언을 한 황순이 할머니(1922~2007)가 정대협과 함께 수요집회에 참가하며 일본의 사죄를 계속 요구했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황순이 할머니는 2006년 미국 하원의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의할 것을 요구한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반대로 “일본 천황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297쪽)고 말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굴복시키려는 욕망”, “도덕적 오만”이라고 꾸짖는다. 사죄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피해자더러 오만하다고 나무라는 박유하의 정신 세계는 학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두 문제다. 잘못된 사실에 대한 확신은 매우 위험하다.

박유하는 식민지 지배의 ‘구조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한다.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구조적인 강제성과 현실적인 강제성의 주체가 각각 누구였는지를 보아야 한다.”(27쪽) 법적 책임의 주체(위안부)를 징모한 민간업자들과 구조적 책임의 주체(일본 제국)를 구분함으로써,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이고 구조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191쪽). 즉, 당시 일본군에게는 ‘위안부’라는 존재를 “발상”하고 ‘위안부’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만들었으며 징모 업자의 유괴나 인신매매를 “육인”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궤변의 실천적 결론은 일본 국가는 법적 책임은 없고 구조적 ‘죄’만 있으므로 “도의적 책임(191쪽)”만 지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유하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만난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은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지배 책임을 회피하려고 빈번하게 꺼내는 미사여구다.\*\* 결국 박유하의 주장은 제국주의 변호론으로 연결된다. 박유하가 아무리 페미니즘 담론을 동원해 자신의 주장을 치장한다 한들, 이 점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 성노예

역사적 진실을 종합해 볼 때 ‘위안부’ 문제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성노예 범죄였다. 이 범죄를 설계하고 동원을 지시한 주범은 당시 일본 국가권력의 핵심부인 일왕과 내각, 일본군사령부, 조선총독부 등이었다. 그리고 박유하가 강조해 문제 삼는 ‘업자’들은 그 종범들이었다.(표 참조)

따라서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서 핵심이자 출발점이다. 이를 부정하는 점에서, 《제국의 위안부》는 반동적인 저작이다.

<sup>\*</sup> 박유하, ‘젊은 역사학자들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답한다’, 《역사문제연구》, 제 33호, 2015.

<sup>\*\*</sup> 서경식,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 《언어의 감옥에서 — 어느 재일 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 ‘역사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실 정치 문제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는 단순히 ‘과거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동아시아 곳곳에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다. 그리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 제국주의는 일본의 범죄를 덮어 준 채 일본을 중심으로 역내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역사 문제’는 각국 정치에 매우 폭발적인 쟁점으로 돼 있다. 이는 기존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오늘날 미국, 일본,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역사 문제’는 더한층 국제정치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구실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종용하며 한일 협력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아직도 식민 지배 기억이 선연한데, 미국의 지원 속에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은 상당히 불안한 미래를 예고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런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와의 ‘화해’를 부르대는 《제국의 위안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일 지배자들의 지향에 부응한다.

▶ 7면으로 이어짐

### 추천 도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정영환 지음, 푸른역사, 2016.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 제국의 거짓말과 ‘위안부’의 진실》, 손종업·양징자 외, 도서출판 말, 2016.



# 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강동훈

12월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3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낮췄다. 정부가 다음 해 성장률을 2퍼센트대로 예측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이다.

통상 정부가 성장률을 높게 잡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2퍼센트 성장도 어렵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성장률을 3.8퍼센트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6퍼센트 성장에 그쳤고, 올해 성장률도 3.3퍼센트로 예측했지만 결국 2.6퍼센트 성장할 듯하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대체로 2.2~2.4퍼센트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2퍼센트대에 머무르면 박근혜 정부 5년 중 4년은 2퍼센트대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2017년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다.

특히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감세·인프라 확대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했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한미FTA 등에 대해서도 재협상이나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1백 일 이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멕시코에 각각 45퍼센트와 35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트럼프의 공약은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구체적이지 않아 모두 실현될지 미지수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저금리를 선호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급격하게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1백만 대 이상을 미국·캐나다 등으로 수출하고 있어 급격

한 관세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백악관에 무역 정책을 총괄할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에 강경한 반중(反中) 인사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지명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는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멕시코 등과 무역 갈등을 일으킬 경우,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무역연구원 분석을 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51.9퍼센트나 됐다. 또 한미FTA 재협상 등으로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할 경우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미 연준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내년과 2018년에도 3회(각각 0.75퍼센트포인트 정도씩)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는 감세,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3~4퍼센트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 국제 발행이 확대돼 시중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미 시장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조차 자금 이탈과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를 막기 위해 보유 외환을 소진하고 있다. 2014년 중반에 4조 달러에 육박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1월 말 3조 5백16억 달러로 5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외환보유액이 1천억 달러인데 단기 외화부채는 1천2백82억 달러나 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53억 달러가 빠져나가 말레이시아의 링깃화 가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말레이시아는 채권의 절반가량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 네덜란드·프랑스·독일의 선거,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와 소비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다.



## 수출·투자·부동산 시장마저 위태로운 한국 경제

한국의 수출은 2015년 8퍼센트 감소했고 2016년에는 6.1퍼센트 감소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로 2017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반발과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으로 대중 수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기업들은 생산을 해도 판매가 쉽지 않자 공장 가동률은 7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설비투자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2016년에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건설투자마저 2017년에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건설투자는 급증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3퍼센트포인트나 끌어올렸지만, 2017년에는 0.3퍼센트포인트 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천3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가계소비도 둔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의

로 국내에서도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부채부담이 늘어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서둘러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1순위 자격과 재대출 금지를 강화하면서 돈 줄을 죄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3 대책 직후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의 집값은 0.22퍼센트 오르며 급등세가 꺾였고,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강남4구에서는 0.3퍼센트 하락했다.

그런데 1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달도 채 되지 않아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시 부양 정책을 내놔다.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면 미분양주택을 정부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1분기에 연간 예산의 30퍼센트 정도인 1백4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20조 원을 경기 부양에 쓰겠다고 한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4백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올해 추경 대비 0.5퍼센트포인트밖에 늘리지 않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경기 부양에 쓰였다는 20조 원 가운데 올해 초과 세수 가운데 지방정부 몫(3조 원)과 연간 예산 집행률 1퍼센트(3조 원) 제고분의 경우 어차피 줘야 할 돈이었고, 공공기관 투자(7조 원)와 정책금융 확대(8조 원)는 간접적 지원이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 지배자들은 다가올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부양과 내핍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체로 내핍을 강요하며,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는 듯한 말이다.

내년 경제에 불확실이 매우 큰 만큼 지배자들은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에 더욱 나설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월 301-0010-1643-71

###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